

Research Article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

남영민 ^{1,2}, 윤지현 ^{1,2}

¹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대북영양정책지원실

OPEN ACCESS

Received: Jan 13, 2020

Revised: Mar 11, 2020

Accepted: Mar 16, 2020

Correspondence to

Jihyun Y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82-2-880-5706/9098

E-mail: hoonyoon@snu.ac.kr

© 202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CID iDs

Youngmin Nam

<https://orcid.org/0000-0002-1179-4059>

Jihyun Yoon

<https://orcid.org/0000-0002-9479-9305>

Funding

Funding for this article was provi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under the project "Laying the Groundwork for Unification".

Conflict of Interest

There are no financial or other issues that might lead to conflict of interest.

<https://e-jnh.or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adults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Youngmin Nam ^{1,2} and Jihyun Yoon ^{1,2}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²Office of Nutrition Policy for North Kore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adults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and factors associated with it.

Methods: An online survey involving 1,000 adults aged 19–69 years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October 2019. Throughout South Korea, the subjects were proportionally distributed with respect to gender, age, and region, to represent South Korean adults.

Results: A total of 44.6% of the respondents agreed (Agreement group), 36.7% disagreed (Disagreement group), and 18.7% neither agreed nor disagreed to food aid to North Korea. Compared to the Disagreement group, the Agreement group had a higher concern of food aid to North Korea and a more positive perception on the effect of it. The Agreement group selected "direct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whereas the Disagreement group chose "support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he most appropriate channel for food aid to North Kore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outh Korean adults showing a more positive perception on the effect of food aid to North Korea were more likely to agree to the aid (odds ratio [OR], 19.32). Moreover, compared to the conservatives, the progressives were more likely to agree to food aid to North Korea (OR, 5.94). South Korean adults in their 40–50s were more likely to agree to food aid to North Korea than those in their 20–30s (OR, 2.81). South Korean adults with a higher concern of food aid to North Korea (OR, 3.93) and a greater positive perception on Korean unification (OR, 1.88) were more likely to agree to food aid to North Korea.

Conclus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associated with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adults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was their perception on the subsequent effect. As strategies to draw social consensus on food aid to North Korea, we recommend systematizing the monitoring process on the effect of providing food aid to North Korea and informing the public of the outcomes.

Keywords: food assistanc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rveys and questionnaires, logistic regression

서론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영양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최악의 식량난 이후 그 상황이 나아지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태에서 곡물의 작황도 좋지 않아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불량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47.8%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부족한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다 [1].

우리나라는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한 1995년부터 대북지원을 실시해왔다. 한반도 통일의 이해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직접지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경유한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왔으며 이러한 지원의 상당 부분은 식량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대북지원을 재개하였다 [3].

2019년 2월, 북한은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하였으며 [4], 국제연합 (UN)도 2019년 5월에 국제사회에 인도적 대북지원을 요청하였다 [5]. 이에 2019년 6월,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의료 및 영양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이 지원금은 유엔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의 북한 영양지원사업과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의 모자보건·영양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6]. 이에 더하여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 (WFP)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쌀 5만 톤의 식량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7].

그러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19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47%가 반대, 9%가 모름/응답거절로 조사되었다 [8]. 그러나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은 인도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모두에서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지원은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미래 한반도의 시민이라는 점에서 식량지원을 장기적인 관점의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면, 정치적 차원에서도 대북식량지원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통일·대북정책은 정량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9].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은 대북식량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8,10]. 그러므로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식량지원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및 이와 관련한 요인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남한 성인의 인식과 더불어 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태도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략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조사 대상 및 방법

2019년 9월 27일부터 12일간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민족의식이 응답의 중요한 배경이 되므로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국적 소유자, 다문화가정 출신자, 탈북민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응답자의 특성이 남한 성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현황 (2019년 8월 기준)을 근거로 [11] 성·연령·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 할당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조사업체가 보유한 패널의 한계로 인해, 제주도 지역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1908/003-001).

조사 내용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인 통일, 북한, 대북정책, 남북문제를 주제로 한 조사 및 선행연구 [8-10,12-15]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측정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분야 전문가 한 명의 자문을 받아 설문을 수정하였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 8명의 식품영양학 전공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표의 개념, 용어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였다.

설문에는 응답자의 일반사항,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대북식량지원 관련 인식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나이, 배우자 및 자녀 유무, 학력, 가구 소득수준, 직업을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관련 조사 및 선행 연구 [8-10,12-15]를 참고하여 응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 정치성향,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의식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뚜렷한 의견 없음)를 조사한 후,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및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북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 및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관련 문항은 ‘평소 대북지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평소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의 두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북식량지원 효과 관련 문항에서는 ‘북한의 식량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의 여섯 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통일 관련 문항은 통일 희망,

통일 실현가능성 전망에 대한 ‘남북통일이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두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북한의 기아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계기아지수 (Global Hunger Index, GHI) [16]의 개념을 설명하고 세계기아지수 심각성 척도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문항은 ‘세계기아지수는 기아 (굶주림)의 정도를 측정해 기아수준을 나타냅니다. 아래와 같이 기아를 겪는 사람이 없는 0점부터 인구 전체가 기아를 겪는 100점까지 기아수준을 점수화하며, 기아수준을 10점 미만의 ‘낮음’부터 50점 이상의 ‘극히 위험’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합니다. 2018년 119개국의 평균 기아수준은 심각한 수준 (20.9점)이었으며, 기아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극히 위험한 수준 (53.7점)이었습니다. 세계기아지수의 5단계 기아수준 중, 북한의 기아수준은 몇 단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기술하였다.

북한의 식량부족 및 북한 주민의 영양불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식량부족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 주민의 영양불량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의 두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방법

결측치, 무성의 응답을 가려내기 위하여 응답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업체로부터 전달받은 1,000명의 자료를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23.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찬성군 (찬성, 매우 찬성을 선택한 응답자)과 반대군 (반대, 매우 반대를 선택한 응답자)으로 나누어 대북식량지원 관련 인식을 비교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또는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응답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찬성, 반대)로,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정치성향,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의 기아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체 응답자 평균이 모두 3점에 근접하였으므로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평균 3.02,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평균 2.97, 통일에 대한 인식 평균 3.18), 점수가 3점 미만과 3점 이상인 응답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은 저관심군 (3점 미만)과 고관심군 (3점 이상)으로, 대북식량지원 효과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저긍정군 (3점 미만)과 고긍정군 (3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현황 (2019년 12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 1,000)

Items	Respondents	South Korean ¹⁾
	n (%)	%
Gender		
Men	508 (50.8)	49.9
Women	492 (49.2)	50.1
Age (yrs)		
19-29	196 (19.6)	18.3
30-39	194 (19.4)	19.0
40-49	227 (22.7)	22.5
50-59	228 (22.8)	23.3
60-69	155 (15.5)	16.9
Region (lived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until 15 years old)		
Seoul metropolitan area	517 (51.7)	50.0
Yeongnam	257 (25.7)	25.1
Chungcheong	100 (10.0)	11.2
Honam	97 (9.7)	10.7 ²⁾
Gangwon	29 (2.9)	3.0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94 (19.4)	-
College enrolled/graduate	702 (70.2)	-
≥ Graduate school enrolled/graduate	104 (10.4)	-
Household income level		
< KRW 3,000,000	242 (24.2)	-
KRW 3,000,000-4,500,000	256 (25.6)	-
KRW 4,500,000-6,000,000	243 (24.3)	-
≥ KRW 6,000,000	259 (25.9)	-
Occupation		
Office/management/professional worker	514 (51.4)	-
Housewife	149 (14.9)	-
Service/sales worker	96 (9.6)	-
Student	79 (7.9)	-
Production/skilled/labor worker	62 (6.2)	-
Agricultural/fishery/livestock/forestry worker, police/soldier	15 (1.5)	-
Others ³⁾	85 (8.5)	-
Spouse		
Have	620 (62.0)	-
Don't have	380 (38.0)	-
Children		
Have	576 (57.6)	-
Don't have	424 (42.4)	-
Political orientation		
Progressive	340 (34.0)	-
Moderate	431 (43.1)	-
Conservative	229 (22.9)	-

¹⁾Percentage of total population 51,849,861 as of December 2019 (data from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7]. ²⁾Included persons living in Jeju. ³⁾Religious person, part time job, freelancer, inoccupation, etc.

기준) [17]을 근거로 전체 남한 인구에 대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율을 계산하였다. 응답자와 전체 남한 인구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남녀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40, 50대 비율이 각각 약 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높아 성별과 연령의 구성 비율이 유사하였다. 과반수 (51.7%)의 응답자가 만 15세까지 수도권에 가장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남한 인구의 1/2 (50.0%)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서도 응답자와 전체 남한 인구의 비율이 각각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한편, 약 70%의 응답자의 최종 학력이 대학 졸업이거나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은 3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150만원을 단위로 네 수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각 수준의 비율이 전체의

Table 2. Attitude of South Korean adults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n = 1,000)

Items	n (%)	
Strongly agree	65 (6.5)	446 (44.6)
Agree	381 (38.1)	
Neither agree nor disagree	187 (18.7)	187 (18.7)
Disagree	245 (24.5)	
Strongly disagree	122 (12.2)	367 (36.7)

Table 3. Reasons for the agreement and disagreement to food aid to North Korea among South Korean adults

Items	n (%)
Reasons for the agreement ¹⁾ (n = 446)	
To help North Koreans in need	333 (74.7)
To improv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288 (64.6)
To lay the found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20 (49.3)
To secure rights to eat for North Koreans	211 (47.3)
To solve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78 (17.5)
To dispose of South Korea's surplus food	72 (16.1)
To consensu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eighboring countries	20 (4.5)
Others	4 (0.9)
Reasons for the disagreement ¹⁾ (n = 367)	
Food aid would benefit only privileged people in North Korea.	287 (78.2)
Food aid would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for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243 (66.2)
There is a lack in transparency of the use of food aid.	241 (65.7)
Food aid would only serve to sustain the North Korean regime.	196 (53.4)
Priority should be given to needy South Korean before North Korean.	190 (51.8)
It is unsure what the food aid will achieve. (e.g. solve food shortage, improve nutritional status, etc.)	176 (48.0)
Food aid would be useless and wasteful.	162 (44.1)
Others	4 (1.1)

¹⁾Multiple responses.

1/4정도로 고르게 나타났다. 과반수 (51.4%)의 응답자가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였으며, 약 15%는 주부로 조사되었다.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62.0%, 57.6%였다. 정치성향은 중도 (43.1%), 진보 (34.0%), 보수 (22.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응답자의 44.6%가 찬성 (찬성 38.1%, 매우 찬성 6.5%), 36.7%가 반대 (반대 24.5%, 매우 반대 12.2%)하였고,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경우가 18.7%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74.7%),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64.6%)로 나타났으며,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49.3%), ‘북한 주민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47.3%)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한편,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특권층만 이익을 볼 것 같아서’ (78.2%), ‘군사적 목적 또는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 같아서’ (66.2%), ‘지원된 식량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서’ (6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 관련 인식

대북식량지원 찬성군과 반대군의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대북지원과 대북

Table 4. Perception on food aid and Korean unification between the agreement and disagreement groups of food aid to North Korea among South Korean adults

Items	Agreement group (n = 446)	Disagreement group (n = 367)	p ¹⁾
	Mean ± SD ²⁾		
Concern about (food) aid to North Korea	3.48 ± 0.78	2.46 ± 1.00	< 0.001
I am generally concerned about aid to North Korea.	3.45 ± 0.81	2.46 ± 1.04	
I am generally concerned about food aid to North Korea.	3.51 ± 0.81	2.46 ± 1.01	
Perception on the effect of food aid to North Korea	3.62 ± 0.64	2.17 ± 0.79	< 0.001
It would help to relieve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3.81 ± 0.66	2.33 ± 0.98	
It would help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us of North Koreans.	3.76 ± 0.70	2.37 ± 0.96	
It would help to improve North Koreans' perception on South Korea.	3.61 ± 0.82	2.22 ± 0.96	
It would help to improv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3.74 ± 0.78	2.19 ± 0.97	
It would help to prepare for Korean unification.	3.56 ± 0.85	2.08 ± 0.98	
It would help to reduce the cost of Korean unification.	3.27 ± 0.98	1.84 ± 0.83	
Perception on Korean unification	3.69 ± 0.92	2.57 ± 0.97	< 0.001
I hope that Korean unification will come true.	3.88 ± 1.00	2.72 ± 1.19	
I think that Korean unification will come true.	3.49 ± 0.99	2.41 ± 0.99	

¹⁾By independent samples t-test. ²⁾5-point Likert scales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 Agree; 5 = Strongly agree).

식량지원 각각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대북지원과 대북식량지원 모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두 문항을 통합한 찬성군과 반대군의 평균 또한 각각 3.48점, 2.46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대북식량지원 효과와 관련한 여섯 개 문항을 통합하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을 때, 찬성군과 반대군의 평균이 각각 3.62점, 2.17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즉,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의 평균이 반대군보다 높아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보다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통일과 관련한 두 개 문항을 통합한 찬성군의 평균은 3.69점, 반대군의 평균은 2.57점으로, 찬성군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가장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 및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을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과 방법 모두에서 찬성군과 반대군의 응답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대북식량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찬성군과 반대군의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p = 0.006$), 전체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

Table 5. Opinions on needy subgroups and channels of food aid between the agreement and disagreement groups of food aid to North Korea among South Korean adults

Items	Agreement group (n = 446)	Disagreement group (n = 367)	p
	n (%)		
People in most needs of food aid			0.006 ¹⁾
Newborn/Infants (< 2 yrs)	97 (21.7)	100 (27.2)	
Children (≥ 2 and < 6 yrs)	205 (46.0)	136 (37.1)	
School-age children (≥ 6 and < 12 yrs)	110 (24.7)	84 (22.9)	
Youths (≥ 12 and < 19 yrs)	18 (4.0)	16 (4.4)	
Women of reproductive age (≥ 19 and < 49 yrs)	4 (0.9)	3 (0.8)	
Pregnant/Lactating Women	5 (1.1)	7 (1.9)	
Elderlies (≤ 65 yrs)	3 (0.7)	4 (1.1)	
Others ²⁾	4 (0.9)	17 (4.6)	
The most appropriate channels for food aid			
Direct assistance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244 (54.7)	80 (21.8)	
Support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g. UNICEF)	167 (37.4)	263 (71.7)	
Support throug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g. Good Neighbors)	35 (7.8)	24 (6.5)	

¹⁾By Fisher's exact test. ²⁾All North Koreans, North Koreans except the privileged people or vested, 0-12 years old, etc. ³⁾By χ^2 -test.

Table 6. Perceptions on the hunger level of and the seriousness of food shortage and malnutrition in North Korea between the agreement and disagreement groups of food aid to North Korea among South Korean adults

Items	Agreement group (n = 446)	Disagreement group (n = 367)	p
	n (%) or mean ± SD ¹⁾		
Perception on the hunger level of North Korea ²⁾			0.004 ³⁾
Low (< 10)	15 (3.4)	10 (2.7)	
Moderate (≥ 10 and < 20)	27 (6.1)	44 (12.0)	
Serious (≥ 20 and < 35)	126 (28.3)	126 (34.3)	
Alarming (≥ 35 and < 50)	165 (37.0)	112 (30.5)	
Extremely alarming (≥ 50)	113 (25.3)	75 (20.4)	
Perception on the seriousness of food shortage and malnutrition in North Korea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is so serious that it is necessary food aid from other countries	3.96 ± 0.79	3.29 ± 1.06	< 0.001 ⁴⁾
Malnutrition in North Korea is so serious that it is necessary food aid from other countries	3.99 ± 0.78	3.35 ± 1.06	< 0.001 ⁴⁾

¹⁾5-point Likert scales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 Agree; 5 = Strongly agree). ²⁾Global Hunger Index severity scales. ³⁾By χ^2 -test. ⁴⁾By independent samples t-test.

된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가장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신생아’, ‘유아’, ‘학령기 어린이’로 조사되었으며 (찬성군 92.4%, 반대군 87.2%), 그 중에서도 유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찬성군 46.0%, 반대군 37.1%). 가장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법으로는 찬성군의 1/2 이상 (54.7%)이 ‘남한정부의 직접지원’을, 반대군의 2/3 이상 (71.7%)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남한 성인의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인식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북한의 기아수준과 식량부족 및 영양불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 (찬성군 90.6%, 반대군 85.2%)가 북한의 기아수준을 ‘심각’, ‘위험’, ‘극히 위험’ 단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찬성군과 반대군의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찬성군이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기아수준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4$). 북한의 실제 기아수준인 ‘심각’ 단계 [16]보다 높은 단계 (위험, 극히 위험)를 선택한 응답자는 찬성군의 약 62%, 반대군의 약 51%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식량부족과 북한 주민의 영양불량 각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찬성군의 평균이 반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북한의 식량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찬성군과 반대군의 평균은 각 3.96점, 3.29점이었으며, 북한 주민의 영양불량의 심각성에 대한 찬성군과 반대군의 평균은 각 3.99점, 3.3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식량부족과 북한 주민의 영양불량에 대해 찬성군이 반대군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 태도 관련 요인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로 포함된 변수들 중,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정치성향,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연령, 통일에 대한 인식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저긍정군보다 고긍정군에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19.3배 높게 나타났다. 진보주의자는 보수주의자보다 찬성할 확률이 5.9배 높았다.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

Table 7.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adults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ems	Agreement group (n = 446) Disagreement group (n = 367)		B	OR (95% CI)
	% or mean ± SD ¹⁾			
Gender				
Men [Reference]	53.6	50.1		
Women	46.4	49.9	0.191	1.21 (0.76-1.94)
Age (yrs)				
19-39 [Reference]	30.0	46.6		
40-59	56.7	34.3	1.032	2.81** (1.52-5.17)
60-69	13.2	19.1	0.277	1.32 (0.61-2.86)
Region (lived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until 15 years old)				
Seoul metropolitan area [Reference]	50.7	52.3		
Yeongnam	23.3	30.2	-0.260	0.77 (0.46-1.30)
Chungcheong, Honam, Gangwon	26.0	17.4	0.408	1.50 (0.87-2.59)
Occupation				
Office/management/professional worker [Reference]	57.0	44.4		
Housewife, student	18.6	28.1	0.123	1.13 (0.65-1.98)
Service/sales worker, production/skilled/labor worker, agricultural/fishery/livestock/forestry worker, police/soldier, others ²⁾	24.4	27.5	-0.125	0.88 (0.51-1.52)
Spouse				
Have [Reference]	67.0	56.7		
Don't have	33.0	43.3	0.245	1.28 (0.60-2.71)
Children				
Have [Reference]	64.1	52.0		
Don't have	35.9	48.0	-0.238	0.79 (0.35-1.79)
Political orientation				
Progressive [Reference]	13.9	35.4		
Moderate	32.3	50.4	0.497	1.64 (0.96-2.81)
Conservative	53.8	14.2	1.781	5.94*** (3.22-10.93)
Concern about aid and food aid to North Korea³⁾				
< 3 [Reference]	3.48 ± 0.78	2.46 ± 1.00		
≥ 3			1.367	3.93*** (2.42-6.36)
Perception on the effect of food aid to North Korea⁴⁾				
< 3 [Reference]	3.62 ± 0.64	2.17 ± 0.79		
≥ 3			2.961	19.32*** (12.25-30.45)
Perception on Korean unification⁵⁾				
< 3 [Reference]	3.69 ± 0.92	2.57 ± 0.97		
≥ 3			0.634	1.88** (1.19-3.00)
Perception on the hunger level of North Korea⁶⁾				
Low, moderate [Reference]	9.4	14.7		
Serious	28.3	34.3	-0.283	0.75 (0.36-1.56)
Alarming, extremely alarming	62.3	51.0	0.080	1.08 (0.55-2.15)

Dependent variable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ttitude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Model χ^2 (p): 563.804 (< 0.001), Hosmer and Lemeshow test χ^2 (p): 5.507 (0.702).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¹⁾5-point Likert scales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 Agree; 5 = Strongly agree). ²⁾Religious person, part time job, freelancer, inoccupation, etc. ³⁾Measured with 2 questions. ⁴⁾Measured with 6 questions. ⁵⁾Measured with 2 questions. ⁶⁾Global Hunger Index severity scales: Low (< 10); Moderate (≥ 10 and < 20); Serious (≥ 20 and < 35); Alarming (≥ 35 and < 50); Extremely alarming (≥ 50).

p < 0.01, *p < 0.001.

한 관심의 경우, 저관심군보다 고관심군에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3.9배 높았다. 연령의 경우, 2-30대 청년층보다 4-50대 중년층에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2.8배 높게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저긍정군보다 고긍정군에서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1.9배 높았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남한 성인이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무려 19배 이상 높게 나타나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파악된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특성이 모집단인 남한 성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연령·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 할당하여 모집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와 전체 남한 인구의 성·연령·지역별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각각의 비율이 모두 유사하였다. 이외의 특성에 대해서는 전체 남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국가통계가 보고된 바 없으나, 정치성향은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8-20],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을 비교하였다. 한국갤럽은 전국 유권자를 대표하기 위하여 본 조사와 마찬가지로 성·연령·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 할당한 전국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8개월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진보 (33.8%), 중도 (28.0%), 보수 (23.3%), 모름 (14.9%) 순으로 보고되어 [21],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 가구 소득수준, 직업 특성의 경우, 본 연구와 조사 주제 및 표본 추출방식이 유사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8 통일의식조사’를 참고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통일 및 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주제로 2007년부터 매년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 통일의식조사’는 성·연령·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 할당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5]. 해당 조사와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연령·지역별 비율은 각각 모두 유사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인 비율이 통일의식조사(45.0%)보다 본 연구 (8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 특성의 경우, 통일의식조사에서는 1/5 (20.4%)의 응답자가 화이트칼라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과반수 (51.4%)의 응답자가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로 조사되었다. 월 가구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응답자 비율은 통일의식조사 (79.7%)와 본 연구 (75.8%)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연령·지역별 특성은 연구 설계에서 의도한 대로 모집단인 남한 성인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중요 변수인 정치 성향 또한 전국 유권자의 특성과 유사하였다. 비록 교육수준과 직업 특성 등 이외의 특성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보다 중요한 특성인 성·연령·지역 및 정치적 성향은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모집단인 남한 성인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응답자의 44.6%가 찬성, 36.7%가 반대, 18.7%가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북식량지원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에서는 2019년 5월에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실시계획에 대한 보도 직후, 해당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성·연령·지역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 할당한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47%가 반대, 9%가 모름/응답거절로 조사되었다 [8].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정부의 2019년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해당 여론조사 당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각각 온라인 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

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설문 조사는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다른 매체 (시각, 청각 등)를 통해 전달되므로, 측정 오차의 발생과 '모름/무응답'의 응답률은 자료 수집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특히,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모름/응답거절'보다 본 연구의 '뚜렷한 의견이 없음'의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조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북식량지원을 찬성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한 성인이 대북식량지원을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밀접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특권층만 이익을 볼 것 같아서', '군사적 목적 또는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 같아서', '지원된 식량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지원된 식량의 분배나 사용에 대한 낮은 신뢰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8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2009년-2018년) 북한 정권에 대한 남한 국민의 신뢰도는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15]. 북한 정권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신뢰도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원된 식량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남한 성인은 반대하는 경우보다 대북지원과 대북식량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통일을 보다 희망하며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와 같이 대북식량지원 태도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결과를 고찰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조사 및 연구에서 국민의 통일 의식을 분석하였으므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통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23-2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8 통일의식조사' 결과, 통일에 대하여 응답자의 59.8%가 '필요하다', 24.2%가 '반반/그저 그렇다', 16.1%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15]. 통일 희망 정도를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47.8%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28.0%가 '반반이다'를, 23.3%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였다. 문항에 차이는 있으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남한 성인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남한 성인은 북한 주민들 중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나이가 어린 신생아, 유아, 학령기 어린이를 선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유아에 대한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성인이 식량부족에 대한 어린 대상자들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영양문제는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영유아 보건을 포함한 모자보건은 대북지원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분야이다 [27]. 실제로도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 어린이, 산모, 여성을 위한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영유아 영양사업의 지원은 지속성을 가지고 큰 규모로 이루어진 바 있다 [28].

한편,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남한 성인은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보다 남한 정부의 직접지원을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반대하는 남한 성인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전격적으로 지지하여 차이를 보였다.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남한 성인의 경우, 지원된 식량의 분배나 사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계 없이 가장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법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4.0%)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방법에 대한 남한 성인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도 2013년 이후 정부차원에서 시행된 대북지원은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 국제기구를 경유하는 지원방식은 정치적 명분과 인도적 고려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액을 전달한 국제기구는 WFP로, 이는 식량지원이 정부의 대북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29].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남한 성인은 반대하는 경우보다 북한의 식량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2019년 북한의 세계기아지수는 27.7점으로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16]. 대부분의 응답자(87.2%)가 북한의 기아수준을 ‘심각’, ‘위험’, ‘극히 위험’ 단계라고 응답하였으며, 북한의 실제 수준인 ‘심각’ 단계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1.8%, 찬성군의 28.3%, 반대군의 34.3%로 조사되었다. ‘심각’보다 높은 단계(위험, 극히 위험)를 선택한 비율은 찬성군에서 더 높아,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남한 성인이 반대하는 경우보다 북한의 기아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식량부족과 북한 주민의 영양불량에 대해서도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남한 성인이 반대하는 경우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인식은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무려 19.32배나 높게 나타났다.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odds ratio [OR], 3.93),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응답자에서 (OR, 1.88)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치성향, 연령 또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보수보다 진보적 정치성향의 응답자에서 (OR, 5.94), 2-30대 청년층보다 4-50대 중년층에서 (OR, 2.81)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치성향은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18-20].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서도 보수보다 진보적인 정치성향의 응답자가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와 결혼 변수는 대북지원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18]. 본 연구에서 연령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었으나 배우자 유무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앞선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달리 대북식량지원이 아닌 대북지원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고, 대북지원과 대북식량지원의 태도 관련 요인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치성향과 연령(세대)은 남한 성인의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모두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확인된 요인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

이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매우 큰 관련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식량지원이 가져올 이익과 효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인식 또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문제와 결부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적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지원에서 모니터링은 중요한 사안이며 [30,31], 대북지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원된 식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면 대북식량지원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준비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통일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대북식량지원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남한 성인의 인식과 더불어 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태도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여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식량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북식량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남한 성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태도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44.6%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36.7%가 반대하였으며, 나머지 18.7%는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북식량지원 효과와 통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법에 대하여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에서는 남한정부의 직접지원을, 반대군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기아수준과 식량부족 및 영양불량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수보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응답자가, 20-30대보다 40-50대 응답자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찬성하는 남한 성인과 반대하는 남한 성인 간에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대북식량지원 관련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

원에 대한 태도와 큰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STAT [Internet].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c2019 [cited 2019 Dec 20]. Available from: <http://www.fao.org/faostat>.
2. Moon KY, Park JY, Song YH. 20 years of aid to North Korea -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through critical review. *J Int Politics* 2018; 23(1): 103-126.
CROSSREF
3. Ministry of Unification. Press release of Ministry of Unification [Internet].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c2019 [cited 2020 Jan 7]. Available from: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
4. European Commission - Directorate General for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ECHO daily flash 23 February 2019.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Directorate General for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2019.
5. United Nations. UN News [Internet]. New York (NY): United Nations; c2019 [cited 2020 Jan 7]. Available from: <https://news.un.org>.
6. Ministry of Unification. Unification pictures of Ministry of Unification [Internet].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c2019 [cited 2020 Jan 7]. Available from: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mov>.
7. World Food Programme. News releases [Internet]. Rome: World Food Programme; c2019 [cited 2020 Apr 17]. Available from: <https://www.wfp.org/news>.
8. Korea G. Gallup Korea daily opinion. No. 354 (week 3, May 2019). Seoul: Gallup Korea; 2019.
9. Park J, Rhee M, Cho WB. Study Series 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8.
10. YTN. YTN survey: public opinion on the food aid to North Korea. Seoul: YTN; 2019.
1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August 2019). Sejo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
12.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lict factors in Korean society and the future of Korea integration. Proceedings of Special Academic Conference; 2016 Jun 10; Seoul. Seoul: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6.
13.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 Social Research. 2014 Public perception survey of human right of North Korea. Proceedings of the Survey Results Presentation Seminar; 2014 Dec 22; Seoul. Seoul: NK Social Research; 2014.
14. Chun KH, Jo DJ, Kim BY, Kim HJ, An SY, Lee JM, et al. 2018 South-North Korea integration index.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2018.
15. Jeong DJ, Kim S, Kim HJ, Na YW, Moon IC, Song YH, et al. 2018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2018.
16. von Grebmer K, Bernstein J, Patterson F, Wiemers M, Ni Chéilleachair R, Foley C, Gitter S, Ekstrom K, Fritschel H. 2019 global hunger index: the challenge of hunger and climate change. Bonn/Dublin: Welthungerhilfe/Concern Worldwide; 2019.
17.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December 2019). Sejo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
18. Kwon SH. Determinants of individuals' preferences toward North Korea policy, 2007-2014. *J Peace Stud* 2016; 17(5): 165-191.
CROSSREF
19. Min TE. South-South conflic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Korean J Legis Stud* 2016; 22(3): 201-229.
20. Lee HS, Park JS. Interest-based perceptions on unification and policy preferences in South Korea. *National Strategy* 2016; 22(4): 34-64.
21. Korea G. Gallup Korea daily opinion. No. 316 (week 4, July 2018). Seoul: Gallup Korea; 2018.
22. Park HJ, Lee SH. Focusing on error, scientific survey method that change the world. Seoul: Changjisa; 2017.
23. KBS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Institute. 2019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Seoul: KBS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Institute; 2019.

24. Park YD, Lee JM. A cohort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national unification and North Korea. *J Glob Politics* 2016; 9(2): 32-67.
25. Lee SS. Do we trust North Korea?: an analysis of Korea trust process with survey data. *Korean Polit Sci Rev* 2013; 47(4): 113-134.
CROSSREF
26. Lee SY.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political power and changes in public opinion on North Korea policy 2015 vs. 2017. Jeju: Jeju Peace Institute; 2019.
27. Cho KS. Infant/child mortality and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Health Soc Welf Rev* 2016; 35(3): 485-515.
CROSSREF
28. Park SM, Lee HW. Current status of healthcare and effective health aid strategies in North Korea. *J Korean Med Assoc* 2013; 56(5): 368-374.
CROSSREF
29. Kim SH, Lee SH, Hwang SH. Aid to North Korea for capacity building of the unification of Kore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ole of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 Int Politics* 2018; 23(1): 5-43.
CROSSREF
30. Moon K. Reinterpret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North Korean Stud Rev* 2012; 16(2): 295-328.
31. Kim SJ. Tasks and directions of development support for North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06.